



금융감독원

보 도 자 료

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4.3.5.(화) 석간	배포	2024.3.4.(월)		
담당부서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1팀	책임자	팀 장	박재민	(02-3145-8129)
		담당자	수석조사역	이교석	(02-3145-8142)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2팀	책임자	팀 장	정윤미	(02-3145-8285)
		담당자	선임조사역	김동균	(02-3145-8526)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 불법사금융 피해, 1332(→3번)로 적극 신고하세요! -

주요 내용

- (신고·상담현황) '23년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총 63,283건의 피해 신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년 60,506건 대비 2,777건[+4.6%] 증가)
 -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3,751건으로 전년(10,913건) 대비 2,838건(+26.0%) 증가하였고, 단순 문의·상담은 49,532건으로 전년(49,593건)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피해 신고·상담 중 불법대부 관련 신고(12,884건)가 전년(10,350건) 대비 2,534건(+24.5%) 증가하였으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 유사수신 피해 신고(867건)도 전년(563건) 대비 크게 증가(+54.0%)하였습니다.
- (대응현황)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8,465건) 및 게시물 삭제(20,153건)를 의뢰하였고,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인 건(503건)은 수사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이 필요한 사안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3,360건)하여 피해구제를 지원하였고,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사안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하여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예방과 수사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며, 금융소비자는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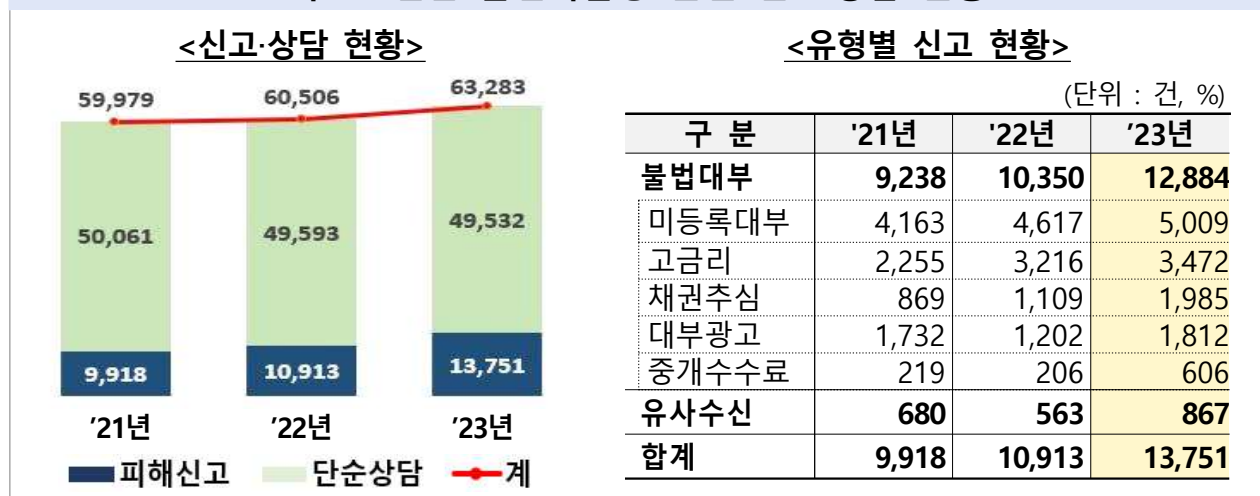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붙임1 참고) >

- ① 거래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우선 확인하세요!
- ②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③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④ 고금리·불법추심 피해시 금감원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 ⑤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는 유사수신행위를 의심하세요!

I.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현황

- '23년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3,283건으로 전년(60,506건) 대비 2,777건(+4.6%) 증가하였습니다.
- ①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3,751건으로 전년(10,913건) 대비 2,838건(+26.0%) 증가하였고, ② 단순 문의·상담은 49,532건으로 전년도(49,593건)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현황



① 피해 신고·상담 : 13,751건 (전년 대비 26.0%↑)

-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12,884건으로 전년(10,350건) 대비 2,534건(+24.5%) 증가하였으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400건, +194.2%)하였는데,

*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수수료, 사례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 금지

-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사례가 많았습니다.

○ 한편,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985건)도 전년(1,109건) 대비 876건 (+79.0%) 증가하였는데,

- 휴대폰,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 하는 등의 악질적인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 유사수신 피해 신고도 867건으로 전년(563건) 대비 304건(+54.0%)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255건)가 다수 발생하였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 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50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피해(우려) 신고·상담 현황(단위 : 건, %)

구분	불법대부					유사수신	합계
	미등록대부	고금리	채권추심	불법광고	불법수수료		
'22년	4,617	3,216	1,109	1,202	206	563	10,913
'23년	5,009	3,472	1,985	1,812	606	867	13,751
증감 (증감율)	+392 (+8.5)	+256 (+8.0)	+876 (+79.0)	+610 (+50.7)	+400 (+194.2)	+304 (+54.0)	2,838 (+26.0)

② 단순 문의·상담 : 49,532건 (전년 대비 △0.1%↓)

□ 불법사금융 관련 법규 및 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 건수는 49,532건으로 전년(49,593건)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채권 소멸시효, 압류 등 채권 회수절차 및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 금융·신용회복 관련 상담이 증가(182건, +46건, +33.8%)하였고,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2,870건, △241건, △7.7%) 및 대포통장 개설(564건, △63건, △10.0%) 관련 문의는 감소하였습니다.

유형별 단순 문의·상담 현황(단위 : 건, %)

구분	법규 및 절차 문의 등	개인 정보	대포 통장	서민금융 신용회복	기타 법률상담	합계
'22년	45,648	3,111	627	136	71	49,593
'23년	45,803	2,870	564	182	113	49,532
증감 (증감율)	+155 (+0.3)	△241 (△7.7)	△63 (△10.0)	+46 (+33.8)	+42 (+59.2)	△61 (△0.1)

(참고)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① 불법 채권추심

- ▶ 불법대부업자 최모씨에게 연락이 와 지인 연락처,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 정보 등을 보내고 20만원 대출 받음(일주일 후 40만원 상환 조건), 일주일 후 상환이 어려워 양해를 구했으나, 대출당시 제공한 모든 연락처로 채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 대부사실 유포
- ▶ 대출 당시 제공한 지인 연락처(600여개)로 채무사실 통보, 밤 늦게까지 추심 연락, 집과 사업장으로 주문하지 않은 배달을 후결제로 보내고, 사업장 주변 가게에 전화해 욕설 등

⇒ (유의사항) 가족·지인의 연락처, 사진파일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불법추심 피해(우려)발생시 금감원·경찰에 신고 및 피해구제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활용(붙임2 참고)

②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 ▶ 저금리 대환대출 안내를 받고 OO은행 앱을 통해 직접 햇살론 대출 300 만원을 받았으며, 소개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해 70만원 송금
- ▶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연락이 와 대출을 위해 전산작업비를 요구해 5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실제 대출이 되지 않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본인 통장은 대포통장이라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며 연락 두절

⇒ (유의사항)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소개수수료·착수금·전산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③ 유사수신

- ▶ A씨는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배우, 사칭)가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위험 없이 월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보고 상담을 실시
- ▶ A씨는 甲업체의 홈페이지상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정부 표창장, 특허증을 보고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임을 믿었으며 甲업체로부터 투자약정서상 원금보장 약정을 받은 후 1,0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이후 사업자는 잠적

⇒ (유의사항) 경제학 박사·유명인 등을 사칭하며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이라며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

II.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 **(대응현황)**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 **(피해예방)**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8,465건)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20,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 **(수사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 **(피해자구제)**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피해구제를 지원하였으며,
 - *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자의 추심대응 및 소송대리를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
 - 상담 건 중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2,321건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하여 금융부담 완화 및 피해자의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 *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22.9월~), 소액생계비 대출('23.3월~) 등
- **(향후계획)** 앞으로도 금감원은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수사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의 협력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 대부중개플랫폼(개인정보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 광고 등) 및 대부업자(민생침해 채권추심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 행위 무효소송 지원(성착취·지인추심 등 2건 지원중)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도 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 고금리·불법추심·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3번)를 통해 적극 신고 및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1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거래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우선 확인하세요!

-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대부업법 제11조의2)되어 있으며, 사례금·착수금·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SNS·전화·문자 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하세요!

- ☞ 문자, 전화나 SNS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정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및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상품 대상여부를 확인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a.or.kr) 참고>

☑ 주소록·사진파일·앱설치 등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 ☞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 특히,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본인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등은 대출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 ☞ 대부업자(등록·미등록)로부터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붙임2 참고)

☑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는 유사수신행위를 의심하세요!

- ☞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광고하는 업자는 불법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붙임 2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방법

① 피해 제보·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제보·신고 가능

①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및 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 spam.kisa.or.kr)로 신고

②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인터넷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제보·신고

③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

[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內 신청 화면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2) '불법금융신고센터' 클릭

①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민원·신고	②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 민원·신고	③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민원·신고
<div>민원·신고 +</div> <div>e-금융민원센터</div> <div>상속인 금융거래 조회</div> <div>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 제보 상담하기 • 제보 상담내용 조회 </div>	<div>민원·신고 +</div> <div>e-금융민원센터</div> <div>상속인 금융거래 조회</div> <div>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이용안내 • 제보하기 • 제보내역조회 </div>	<div>민원·신고 +</div> <div>e-금융민원센터</div> <div>상속인 금융거래 조회</div> <div>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 이용안내 • 피해신고 • 신고내역조회 </div>

②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

- (전화 신청)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로 접속 후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신청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FSS homepage with the '민원·신고' (Petition/Report) menu highlighted. In the sidebar, the '불법사금융신고센터' (Illegal Financial Institution Reporting Center) is expanded, and the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Application for Free Support System for Debtors' Representatives and Litigation Attorneys) is highlighted with a red dashed box. The main content area shows the '불법사금융신고센터' (Illegal Financial Institution Reporting Center) with a table of services. A red arrow points from the sidebar link to the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link in the table.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불법채권추심·고금리 수취·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제보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대부중개업체 등에 의한 대출중개수수료 편취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 신고코너'를 설치·운영하면서 중개수수료 편취 피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의 불법 행위, 불법 상호의 사용, 기타 사이버상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민감시단 전용제보	「온라인 시민감시단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미등록대부, 적업대출, 통장매매, 신용카드 현금화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①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②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月 278.6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